

순천만정원박람회장 하루 18만명 입장...인파 '복적복적'

개장후 8일만에 70만8000여명 다녀가... 인기 실감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 특 트인 잔디밭에서 해소”

순천시 오전동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8일 하루 최다 18만여 명의 관람객이 입장하는 등 개장후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개장 이후 8일까지 70만 8000여명이 정원박람회를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정원박람회는 모처럼 단비가 내린 날을 제외하고 주말 10만 명, 평일 5만 명의 꾸준한 관람객이 찾고 있다. 툄립과 봄꽃 가득한 박람회장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비롯해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는 연인들, 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 관광객들이 180만㎡(60만 평)의 드넓은 박람회장 곳곳에서 힐링하는 모습이 연출 됐다. 어린이들은 주로 어린이 동물원, 국가 정

원 물새 놀이터, 유아 가든, 노을정원 등에서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거나 잔디광장을 딩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람객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정원드림호와 국가정원식물원, 시크릿가든, 오전 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의 푸른 잔디를 찾아 즐기기도 했다. 이처럼 관람객이 대거 입장하면서 입장권 판매 수익과 박람회장 내 식당 및 기념품가게의 매출실적도 18억 원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박람회장 주변 상가들도 활기를 띠는 마찬가지다. 주로 식당과 커피숍에서 식사와 대화를 하는 손님이 크게 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답답했던 국민들이 특 트인 정원박람회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

며 힐링 하기 위해서 개장 초 많이 찾고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박람회를 통해 1조 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원박람회장에 인파가 몰리면서 개장 시간 차량이 몰리거나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초래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박람회장 주변 일부 주민들은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오전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에 바위가 달린 운송수단이 진입하거나, 애완견의 출입 시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박람회장과 달리 무료로 입장 가능한 오전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순천시의 새 명물로 떠올랐다. 주말 주제공연이 열리는 오전그린광장은 저유지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풍광을 연출하고 있으며 차도에 잔디를 입혀 그린아일랜드 역시 순천만의 자랑으로 급부상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람객들로 박람회장 주변 상인들은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님들이 많이 와 기분 좋다”, “작년에 비해 매출이 4배 정도 올랐다” 등 박람회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는 상인들도 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1조 5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박람회 완성도에 있어서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게 준비를 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 여러분, 순천에 오셔서 힐링하시고 재충전해 가시라.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몸소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2023 보성

세계차茶 EXPO

2023 The 11th BOSEONG WORLD TEA EXPO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다!”

·기간 2023.4.29.~5.7.(9일간)

·장소 보성군 일원

주최·주관 보성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2자녀부터 다자녀...어린이집 우선순위 받는다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보육 우선 제공

앞으로 2자녀도 다자녀로 인정돼 연령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였다.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

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한 비용 사전 예약 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고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2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슬비기자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52곳 과태료 부과 착수

고용부, 한국노총 4.7% 민주노총 59.7% 미제출...현장조사 실시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관련 서류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보고하는 않은 해당 노조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데 이어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120곳)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며,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나머지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 비율은 4.7%(8곳)인 데 반해 민주노총은 59.7%(37곳)에 달해 한국노총보다 12배 이상 높았다. 한국노총은 총연맹의 자료제출 거부 지침에도 95.3%(164곳)이 자료를 제출했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조(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超)기업 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